

광고 위반 제재금은 이미 10억원인데 무엇이 새로 정해지나

제재금 제도는 이미 있고, 이번 개선안은 광고 심사 범위와 위반별 부과기준을 만드는 절차다

2026년 9월 1일 개선안, 금융투자협회 현행 제재 규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대조해 새로 정하는 항목과 이미 있는 제도를 나눴습니다.

발행	2026.09.02	연번	2026_81
읽는 시간	7분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자료 기준일	2026.09.02	검증	공식 원문·현행 법령 대조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이번 개선의 핵심을 제재금의 신설이 아니라 광고 심사 대상과 부과기준의 구체화로 본다. 법률상 과징금과 협회 자율규제 제재금은 부과 주체와 징수 절차가 다르다. 같은 10억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같은 제재로 읽으면 안 된다.

CONTENTS

이 글의 순서

- 01 연구소의 판단
- 02 확정된 사실
- 03 왜 이런 구조인가
- 04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 05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 06 지금 할 일
- 07 갈림길
- 08 함께 읽을 것
- 09 근거와 검증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투자광고 절차를 고칩니다. 협회 제재금의 최고한도 10억원은 기존 규정에 이미 있으며,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은 광고 위반의 경중을 어떤 금액과 조치에 연결할지입니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026년 9월 1일 금융투자회사 광고 업무 절차 종합 개선안을 설명했습니다. 협회는 9월 초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10월 중순까지 개정을 마친 뒤 2027년 1월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선안 설명	2026.9.1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
예정 시행	2027년 1월	규정 개정 후
기존 제재금 상한	10억원	협회 제재 규정 제14조
이의신청	통지 후 30일	협회 제재 규정 제22조
새로 정할 항목	광고 위반별 기준	심사 범위·제재 수준
사후점검	연 1회 이상 추진	게시 광고 일치 여부

개선안은 광고 제작·심사 절차 강화, 협회 안 광고위원회 신설과 심사 대상 확대, 광고 위반 제재 기준 신설, 사후점검과 신고센터 활성화로 구성됩니다.

회사 자체 채널에 올리는 신규 상장 ETF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동영상 광고 등을 협회 심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세부 범위는 개정 규정에서 확정됩니다.

협회 현행 규정은 제재금, 경고, 주의 등을 이미 제재 종류로 두고 제재금 최고한도를 10억원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개선안의 '제재 기준 신설'은 제재금 제도를 처음 만드는 조치가 아닙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광고에 반드시 넣을 내용과 금지되는 표현을 정하고, 시행령은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의 사전 심의를 요구합니다. 협회 심사는 자율규제 규정이 더하는 절차입니다.

협회 제재금은 자율규제위원회가 회원사에 부과합니다. 납부기한은 통지 후 1개월이고 미납 기간에는 연 9%의 연체금이 붙습니다. 현행 규정만으로 금융위원회의 과징금처럼 국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징수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은 금융위원회가 부과합니다. 광고 의무 위반과 관련된 계약 수익의 50% 이내이며 수익산정이 어렵다면 10억원 이하입니다. 독촉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같은 광고에 협회 제재와 행정상 과징금·과태료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개선안은 협회 내부 기준을 고치는 것이므로 행정제재의 근거와 집행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자체 유튜브 등 지금까지 협회 심사 밖에 있던 동영상 광고를 제작하는 금융투자회사는 게시 전 확인 절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광고가 협회 심사를 거쳤다는 사실을 손실 보장이나 상품 적합성 인증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심사는 광고 표현과 절차에 대한 것이고 투자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재 사실의 공표 범위도 중요합니다. 현행 규정은 제재 내용을 공표하되 주의 조치에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광고 위반에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개정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협회 제재금	최고 10억원	기존 상한
법상 과징금	관련 수익의 50% 이내	산정 곤란 시 10억원 이하
협회 연체금	연 9%	미납 기간 적용
이의신청	30일	두 제도 모두 기한은 같지만 절차는 다름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 위반별 금액

광고 위반의 경중과 주의·경고·제재금을 연결하는 최종 산식은 개정 규정과 별표에서 확정됩니다.

02 · 심사 대상

자체 채널 동영상 중 어떤 상품과 형식까지 의무 심사에 들어가는지는 예고안 문언을 봐야 합니다.

03 · 중복 제재

한 광고에 협회 제재와 금융위원회 과징금·과태료가 함께 적용될 때의 조정 기준은 공개 자료에 뚜렷하지 않습니다.

04 · 공표 방식

광고 관련 주의·경고에 회사명과 광고 내용을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05 · 지금 할 일**지금 할 일****국민**

- 광고 화면, 게시 주소와 본 날짜를 함께 저장합니다.
- 수익 보장이나 일부 기간 수익률만 강조한 광고는 금융투자협회 불법광고 신고 창구에 알립니다.
- 협회 심사를 손실 보장으로 오해하지 말고 투자설명서의 위험과 비용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금융회사

- 자체 채널의 동영상과 시황정보가 투자광고에 해당하는지 게시 전에 분류합니다.
- 최종 심사본과 실제 게시본의 일치 여부를 기록하고 정기점검 결과를 보관합니다.

당국

- 예고안에 위반 유형별 제재 수준과 공표 기준을 함께 제시합니다.
- 자율규제 제재와 행정제재가 병행될 때의 처리 원칙을 설명합니다.

갈림길**광고 위반이 회사명과 함께 공개되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개정 규정의 제재 공표 범위와 주의·경고의 실명 처리

A

위반 광고를 특정한다
투자자는 어느 회사의 어떤 광고가 문제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B

제재 유형만 공개한다
광고를 본 사람이 자기 거래와 제재 사실을 연결하기 어렵습니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 2026년 9월 규정 예고안과 2027년 시행 뒤 협회 제재현황공표 게시판을 확인합니다.

함께 읽을 것**2개의 연결 지식**

[금융상품 ETF](#) ↗

[소비자보호 투자광고](#) ↗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5건

01	1차 · 광고 절차 개선안의 네 항목과 2027년 1월 시행 계획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 발표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 · 확인 2026-09-02 · 확인 2026-09-02 원문 열기 ↗
02	1차 · 협회 회원 제재의 종류, 제재금 최고 10억원, 납부기한과 연 9% 연체금 한국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확인 2026-09-02 · 확인 2026-09-02 원문 열기 ↗
03	1차 · 협회 제재 이의신청은 통지 후 30일, 재이의 불가 같은 협회 규정 제22조 · 확인 2026-09-02 · 확인 2026-09-02 원문 열기 ↗
04	1차 · 금융상품 광고 의무와 관련 협회의 기준 준수 확인 근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 확인 2026-09-02 · 확인 2026-09-02 원문 열기 ↗
05	1차 · 광고 위반 과징금의 산정과 국세 체납처분 방식의 징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61조 · 확인 2026-09-02 · 확인 2026-09-02 원문 열기 ↗

추적 예정	최종 규정의 광고 심사 범위, 위반별 제재금 산식과 실제 공표 사례를 확인합니다.
정정 이력	첨부 원고의 제재금과 과징금을 같은 제도로 읽을 수 있는 표현을 분리했습니다. 제재금 10억원은 기존 협회 규정상 최고한도입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공개된 개선안과 현행 규정을 분석한 것이며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최종 심사 범위와 제재 기준은 개정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